

2021년 브라질 노동분야 주요 이슈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브라질

김경란 (브라질 캠피나스 주립대학교(Unicamp) 사회경제와 노동 박사과정)

■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거듭된 코로나19 변이의 출현 속에서 최근 브라질은 전체 국민의 67%에 해당하는 1억 4,4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2022년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브라질 최대 축제인 거리 카니발이 취소되는 등 방역이 다시 강화되고 있으며, 브라질 보건부는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늦춰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 증가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이하 IPEA)는 2021년 9월 말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와 상업 부문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고용 사정도 나아지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일부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대에 달하고 실업률이 14%대에 이르는 등 일반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는 최악이다. 이 글에서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느린 경기 회복세 속에서 2021년에 쟁점이 되었던 브라질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고용 상황을 잘 보여주는 높은 실업률을 확인해본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노동의 변화와 관련한 재택근무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해 각각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한 해 노정 간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 높은 실업률

브라질 국립통계원(이하 IBG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¹⁾ 2021년 3분기 취업자 수는 9,300만 명으로 2분기 대비 4% 증가했으며, 고용률(14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4.1%로 전년동기대비 5.1%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6,550만 명으로 전년대비 9.4% 감소했다. 취업자를 고용형태별로 분류하면 민간부문 정규직 노동자(가사 노동자 제외)는 3,350만 명으로 전년대비 8.6%(약 270만 명) 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1,170만 명으로 전년대비 23.1%(약 220만 명) 증가했다. 비공식 노동의 비율은 2020년 38%에서 2021년 40.6%로 늘었다.

2021년 3분기 실업률은 12.6%로 1,350만 명에 달했다. 2020년 3분기 실업률 14.9%와 비교하면 2.3%p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실업률은 12%에 머물렀었다.²⁾ 국영 신용위험 평가기관인 오스틴레이팅(Austin Rating) 조사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브라질의 실업률은 전 세계 40개 이상 국가의 평균 실업률인 6.5%의 두 배이며, 이들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³⁾

실업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이들이 빈곤층이나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소득이 없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상파울루주의 노숙자가 2019년 2만 4,300명에서 2021년 6만 6천 명으로 늘었다.⁴⁾ 일자리 및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인 이다도스(Idados)가 IBGE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는 2021년 2분기 기준 전체 실업자 1,440만 명 중 41.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약 600만 명은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며, 380만 명은 2년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실업자

1) IBGE(2021), “PNAD Contínua : taxa de desocupação é de 12,6% e taxa de subutilização, de 26,5% no trimestre encerrado em setembro”, *AGÊNCIA IBGE NOTÍCIAS*, Novembro 30,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 (검색일 : 2021.12.2).

2) *Ibid.*

3) Alvarenga, D.(2021), “Brasil tem a 4ª maior taxa de desemprego do mundo, aponta ranking com 44 países”, *g1*, Novembro 22, <https://g1.globo.com> (검색일 : 2021.11.30).

4) Mello, D.(2021), “São Paulo tem mais de 66 mil pessoas que vivem em situação de rua”, *Agência Brasil*, Outubro 15, <https://agenciabrasil.ebc.com.br> (검색일 : 2021.11.30).

비율은 2020년 2분기 23.9%에서 2021년 2분기에 26.1%까지 상승했다.⁵⁾

2021년 고용이 회복되고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등 전년보다 개선의 조짐은 있지만 높은 실업률을 낮출 만큼의 충분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일자리도 단기 임시직이 많아 비정규 고용이나 비공식 노동이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실업과 빈곤, 노숙자의 가파른 증가는 브라질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2022년 10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용 및 실업대책과 사회복지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재택근무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IPEA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재택근무자는 약 8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380만 명이었던 것이 2년 사이 약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택근무자는 주로 민간부문(63.9%)과 민간부문 여성(56%), 백인(65.6%), 고등교육 이수자(74.6%)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 조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백인과 여성의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다.⁶⁾

브라질에서 원격근무는 2017년 노동법 개정(Lei nº 13.467/2017) 당시 통합노동법 제75조(CLT Art. 75-B)에 포함되었다. 원격근무는 사업장 밖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교대근무 중 휴식 등에 관한 권리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컴퓨터, 태블릿, 전기, 인터넷,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원격

5) Carneiro, L.(2021), "Pandemia intensifica desemprego de longa duração no país", Valor Econômico, Setembro 8, <https://valor.globo.com> (검색일: 2021.12.16).

6) Sandoval, G., S. M. Felipe and S. N. José(2021), "Trabalho remoto no Brasil em 2020 sob a pandemia do COVID-19: quem, quantos e onde estão?", <https://www.ipea.gov.br> (검색일: 2021.11.24).

근무자는 노동법에 명시된 서면 고용계약, 휴가, 연말 상여금,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만, 식비나 교통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원격근무 중에서도 재택근무는 집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격근무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재택근무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받지 못했고 식비나 교통비 등의 수당지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원격근무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잠정조치(MP 1.046/21)를 공포해 재택근무자에 대한 추가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원격근무의 적용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강화하거나 인턴과 수습생에게도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장비를 무료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에서 대면근무로 또는 대면근무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전에 미리 공지하는 것으로 정했다.⁷⁾

앞으로 재택근무는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대면근무를 대체하는 근무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근무자나 기업의 입장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재택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에 부응하는 추가적인 규제방안 보완이 요구될 것이다.

■ 플랫폼 노동

최근 새로운 노동형태로 주목받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호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하원에 제출된 플랫폼 노동 관련 법안만 해도 64개에 이르며,⁸⁾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개별 자영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되 통합노동법이 아닌 특별

7) Tribunal Superior do Trabalho(2021), “TELETRABALHO”, <https://www.tst.jus.br> (검색일: 2021.11.25).

8) Câmara dos Deputados(2021), “Comissões promovem audiência sobre regularização profissional dos motoristas de aplicativos”, <https://www.camara.leg.br> (검색일: 2021.12.3).

법으로 사회보장권 일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⁹⁾ 브라질의 플랫폼 노동은 주로 운송과 배달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부문의 수요가 증가해 종사자도 함께 늘었다. IPEA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여객 및 화물 운송 종사자는 약 14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배달노동자는 2016년 3만 명에서 2021년 2분기 27만 8천 명으로 증가해 4년 사이에 979.8%나 늘어났다.¹⁰⁾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함께 법적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동자를 대신해 공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브라질 노동검찰(MPT)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노동검찰은 배달·운송업 노동자의 임금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21년 11월 8일 노동검찰은 차량공유 업체인 99와 우버, 배달앱 라피와 라라무브를 상대로 고용관계 인정 여부를 다루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검찰은 플랫폼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검찰은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를 단순히 앱 개발자 혹은 공유기술 유지·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주요 활동은 최종 이용자(회사, 식당,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겠다고 장담했다.¹¹⁾

한편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 연대 모임도 있다.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바이아 연방 대학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아 대학의 교수와 석·박사생 및 바이아 노동검찰청은 파트너십을 형성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무료로 의료 및 법률 지원을 하거나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조직 소송을 준비하는 노동의 길(Caminhos do Trabalho : UFBA-MP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얼마 전에는 지원센터가 추진한 소송에서 첫 성과를 얻었다. 살바도르 제11 노동법원의 페르난다 카르발유 아제베두(Fernanda Carvalho Azevedo) 판사가 우버이츠에서 배달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직원의

9) Versiani, I.(2021), “Governo quer acelerar formalização de trabalhadores de plataformas digitais”, *CNN Brasil*, Agosto 2, <https://www.cnnbrasil.com.br> (검색일 : 2021.12.3).

10) Góes, G., F. Antony and M. Felipe(2021), “A gig economy no Brasil: uma abordagem inicial para o setor de transporte”, <https://www.ipea.gov.br> (검색일 : 2021.12.4).

11) MPT-SP(2021), “MPT requer que 99, Uber, Rappi e Lalamove reconheçam vínculo trabalhista”, <https://www.prt2.mpt.mp.br> (검색일 : 2021.12.7).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자의 판례를 모아 입법적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¹²⁾

노동시장의 구조가 매우 이질적이고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브라질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인식되는 플랫폼 노동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 뜨거운 만큼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보호방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와 의회, 노동검찰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부문 개혁 헌법 개정안

2021년 노정 간의 대립이 첨예했던 대표적인 이슈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꼽을 수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2020년 9월 의회에 제출한 공공부문 행정개혁안(PEC 32/2020)이 2021년 9월 24일 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를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로 맞서는 등 2021년 하반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공부문 개혁은 2019년 1월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작은 정부와 친시장주의” 정책을 지향하며 추진해 온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¹³⁾ 개혁안은 연방, 주, 지자체의 인력 감축과 행정조직 개편, 성과평가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 공공기관 경영을 쇠신하고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조직과 인력을 줄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허용 등 시장 원리와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행정개혁안이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악화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무엇보다

12) bahiadevalor(2021), “Justiça reconhece vínculo de emprego entre entregador e Uber na Bahia”, Novembro 14, <https://www.bahiadevalor.com.br> (검색일 : 2021.12.7).

13) 보우소나루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는 연금과 조세, 노사관계 개혁, 공기업 민영화 및 행정조직 효율화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연금 개혁은 2019년 10월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2세로 높이고 최소 가입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다 행정개혁안 중에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가능성과 비정규직 확대, 성과평가제 도입을 가장 우려했다. 정부는 브라질은 공무원 수가 많고 이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인력 조정 필요성을 밝혔지만,¹⁴⁾ 노동계는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율이 약 12%에 불과해 OECD 32개국 평균인 21%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과평가제는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지나친 경쟁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어렵게 국가채용시험을 통과하여 공공부문 노동자가 되었지만, 최소 1~2년 동안 직무훈련을 거쳐 성과평가를 받고 계속 근무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쟁 과열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과평가제를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 허용도 쟁점이 되었다. 행정개혁안은 재난이나 긴급상황 등 일시적인 필요가 있거나 기간이 정해진 계절 업무와 공공행정 프로젝트에 기간제 고용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갱신을 통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동일 업무에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의 대체는 금지된다. 기간제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법적 혜택으로는 퇴직금, 최저임금, 주택 및 건강 관련 부가급여, 연말상여금, 야간수당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급여삭감 금지 등이 있고,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하되 개별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단축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¹⁵⁾ 이처럼 성과평가제 도입이나 기간제 사용의 확대는 브라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인식되어 왔던 공공부문에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개혁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원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자극하지 말자는 자정 움직임도 있어, 개혁안이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⁶⁾

14) 2020년 2월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 경제부 장관은 공무원은 안정적인 자리에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고 월급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자동 인상되고 있다며, 죽어가는 정부에서 공무원은 기생충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15) DIEESE(2021), “Reforma Administrativa do Governo Bolsonaro”, <https://www.dieese.org.br> (검색일: 2021.12.9).

16) Meira, V.(2021), “Reforma Administrativa : comissão aprova PEC32/20 com a manutenção

■ 공기업 민영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취임 당시 연방정부 산하 공기업의 70%를 민영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후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 연방정부가 소유한 에너지, 전력, 우편 등 9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주력해왔다. 2021년 6월 22일에는 브라질 최대 국영 전력회사인 엘레트로브라스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찬성 258표, 반대 136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엘레트로브라스의 시설 일부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레트로브라스 민영화 결정 과정에서 야당은 민영화가 민간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파울루 게지스(Paulo Guedes) 경제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민영화를 통해 전력비용을 7.4%가량 감축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모든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민영화 절차가 시작되면 정부의 주식 지분율은 기존 51.8%에서 45%로 낮아지고 정부는 주식 매각으로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엘레트로브라스는 현재 브라질 전력 생산의 32%, 전송의 52%를 차지하며 47개의 수력 발전소, 114개의 화력 발전소, 2개의 원자력 발전소, 69개의 풍력단지에서 총 1만 7천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밖에 국영은행 방쿠 두 브라지우,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국영우체국 코헤이우스도 핵심 민영화 대상이다. 통신 및 우편 업무를 수행하는 코헤이우스는 2021년 4월 13일 국가 민영화 계획(PND)에 포함되었으며 의회에서 법안(PL 591/2021) 논의가 진행 중이다.

브라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앞세우는 명분은 재정 건전화와 공공부채 해결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1%였던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부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동한 경제 부양책으로 인해 2020년 기준 GDP 대비 89%에 이르렀다.¹⁸⁾ 브라질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최대 4,500억 헤알(약 141조 2,415억 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

de trechos polêmicos: Entenda”, *Jconcursos*, Setembro 24, <https://jconcursos.com.br> (검색일: 2021.12.3).

17) 브라질 정부가 선호하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정부가 제한된 기간 동안(10~30년) 민간업체에 인프라 혹은 시설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공기업 주식 상장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18) CUT(2021), “Dívida Pública do Governo Federal(% PIB)”, <https://www.cut.org.br> (검색일: 2021.12.10).

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민영화를 통해 중국 등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부문을 개혁 및 효율화하고, 공공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해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2019년 다따폴라(Datafolh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25%)보다 반대(67%)가 높았다. 무엇보다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공기업 노동자의 저항이 커 페트로브라스와 코헤이우스 노조는 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민영화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¹⁹⁾

■ 맺음말

이 글에서는 2021년 브라질의 5대 고용·노동 이슈를 짚어보았다. 먼저 높은 실업률과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브라질 경제의 고용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빈곤 등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고용 구조와 노동의 변화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플랫폼 노동도 향후 제도 개선이나 입법 과제 중심으로 노사와 정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마지막 개혁 과제가 될지 모르는 공공부문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의 진행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2022년 초부터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보우소나루 정부의 개혁 동력도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지속과 2022년 10월에 치러질 대선이라는 큰 변수에 따라 주요 쟁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LI**

19) CUT(2021), “Petroleiros preparam greve nacional contra projeto de privatização da Petrobras”, <https://www.cut.org.br> (검색일 : 2021.12.10).